

다산포럼



강수돌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늘 선거철만 되면 나는 두 가지를 떠올린다. 하나는 장 자크 루소의 명언으로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 예만 주인의 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우스콘신'이라는 미국의 독립영화다.

루소의 명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알면서도 또 오류를 반복한다.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는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어리석음, 과연 이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물론, 현실과 원칙의 차이는 늘 존재하고 그래서 갈등한다.

루소의 명언보다 더 와 닿는 것은 5분짜리 독립영화 '마우스콘신'이다. 마우스콘신이란 미국의 위스콘신주를 패러디한 것으로 쥐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 쥐들의 마을에 선거가 닥친다. 여러 공약들이 난무하고 마침내 대표(대통령)를 뽑는다. 우습게도 고양이 쥐들의 대표로 선출된다. 모든 쥐들은 4-5년 간 이리저리 시달린다. 심지어 꼬리가 잘리거나 통째로 잡아먹히며 피를 흘린다.

마우스콘신의 역설을 넘어서기 위하여

그렇게 피비린내 풍기는 세월이 지나 또 선거를 한다. 어이없게도 지난번엔 검은 고양이, 이번엔 흰 고양이 가 뽐낸다. 설마 했는데, 역시-다. 또다시 쥐들은 한숨을 쉬며 고양이에게 거듭 시달린다. 겉으로는 좀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실상에서는 더 가혹해진다. 고양이들이 쥐를 지배하는 노하우가 쌓인 탓이다. 또 피 흘리는 고통의 세월이 지나 다시 선거철이 온다. 아이쿠, 이번엔 얼룩 고양이가 뽐낸다. 얼룩 고양이는 처음엔 쥐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더니 갈수록 목을 더 친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다.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새 선거가 온다. '마우스콘신의 역설'이다.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도 쥐 한 마리가 용감히 일어난다. "쥐 여러분, 이제는 절대 고양이를 뽑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나설시다" 이 외침에 수많은 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영화는 '쥐 죽은 듯' 끝난다. 5분짜리 영화지만 큰 울림을 준다.

자, 이제 이 영화의 교훈을 우리네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쥐들의 마을에서 고양이를,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자들을 대표라고 뽑는 어리석음을 반복 않으려면?

첫째, 나는 민주, 진보, 양심 세력을 우리의 대표(1명)로 뽑기 위해서라도 '선명성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승리 후 역할분담이나 진보 개혁 합의는 그 전제조건이다.) 솔직히, 나는 예전엔 선명성 경쟁을 중시했다. 설사 낙

선을 하더라도 민주, 진보, 양심을 선명하게 외치는 것이 대중적 감동을 줌으로써 차후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지난 20-30년 사이에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별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아직도 한국 사회는 깊은 '집단 트라우마'와 '강자 동일시'로 인해 '민주 개혁' 정도엔 동의를 하지만 '사회 개혁' 구호엔 두려움을 느낀다. 원론과 현실의 차이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 후보와 진보 후보 간 경쟁을 하면 결국 수구(극우) 세력에게 '어부지리'만 남긴다.

둘째, 그럼에도 나는 자본이 인간과 자연을 망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의 대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지금처럼 지역구별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당에만 표를 주는 새 제도(100% 정당비례대표제)를 만드는 것이다. 각 정당이 지역, 직업, 성별, 나이 등을 감안, 예비후보 명단을 미리 제출한 상태에서 득표율을 보고 선정하면 된다. 그리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양대 정당이 아니라 무지개 빛깔의 다양한 정당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거나 연립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셋째, 초·중·고·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 평소에도 독서, 토론, 발표 등을 꾸준히 해야 선거 등 중대사 결정 시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더 이상 결연, 지연, 학연 같은 게 아닌 정책, 비전, 철학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한 표가 세상을 망친다! 이제, 나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기고



최혁신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12월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27.2%로 광역자치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광주도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에 비해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3년 OECD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국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은 40%로, OECD 평균 14%의 3배 수준이며, 76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52%에 달한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로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0만원에 머무르는 등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자산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 중 약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고령층은 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우미, 주택연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은 부족한 소위 '하우스 푸어'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자산인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집값과 누적연금 수령액을 비교해서 남으면 상속되고 부족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노후에 주거 안정과 안정적 소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명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가입자가 연평균 약 17%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가입자 사망 시 등기이전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정기적액형' 등 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해졌다. 다주택자도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저가주택 보유 시 최대 20%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확대됐는데 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

역 어르신들께 유리하게 개선되었다고 하겠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는 노후는 자산이 아니라 소득이 지탱한다고 말한다. 보유한 자산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금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머튼 교수는 또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연금이 은퇴 이후 소득절벽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가능케하는 솔루션으로 최적의 금융상품이라는 의미이다.

100세 시대, 길어진 수명만큼 노후를 좀 더 여유롭고 평온하게 영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팔지 않고 거주지를 유지하며, 국가의 지급 보증 아래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주택연금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집이 곧 효자'가 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말처럼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만들기 어렵다.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주택연금과 같은 국가가 보증하는 맞춤형 제도를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면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다장성음(多掌成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자립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있어 주택연금이 특급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계속 키워 나가길 기대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효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대통령 후보들의 동물복지 공약 진정성은

보·외교 등과 비슷한 속도는 아니었지만 선거운동 열흘 만에 동물복지 공약이 발표된 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

언젠가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 기간마다 동물복지 공약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은 반례인이 상당한 유권자 분포를 차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거철에 발표되는 동물복지 공약이 그저 다수의 동물권 유권자를 의식한 구색에 불과한 의례인가 아니면 실현할 의지가 담긴 진정된 공언인가에 대한 속제는 늘 그 공약을 믿고 주권을 행사했던 유권자들의 몫이 된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그간 여러 선거에 등장했던 익숙한 내용들이었다. 동물권에서는 금지어나 다름없는 '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보도 있고 반례인들과 동물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약을 낸 후보도 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불법 번식장 및 유사보호소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 확충, 실험동물 감축, 동물진료비 표준수거제, 봉사동물에서 야생동물의 복지까지 동물복지의 총론이라 할 정도의 공약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입법 절차를 요구하는 공약들로 선거철 독립노래와 같은 느낌이다.

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다. 위에 열거된 저 공약들을 전담

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공약을 이행할 전담 행정조직 없이 농림부의 한 부서에서 그리고 지자체 축산과 안에서 동물복지의 모든 정책을 다루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발표되는 동물복지공약은 선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권자들도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러던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 공약이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명칭만 바뀌어 같은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열심히 주장했었다.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선거 기간 내에 반례인 수백 명의 서명을 모아 한 후보의 지지 선언을 두 번이나 주최했다. 그 이유는 명료했다. 공약을 정확히 실현할 후보를 지지했을 뿐이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적 큰 상처를 안고 갑자기 치르게 된 만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달려질 중요한 공약들에 집중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1500만 명에 육박하는 반례인들의 정서를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반례인과 비반례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인간의 윤리적 기준의 폭을 고통받고 죽어가는 가여운 생명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의 역사도 길지 않은 동물 정책 추진국인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견인할 유일한 방법은 동물복지진흥원 같은 전담 행정조직의 설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물권과 민생을 분리하지 않고 국민의 30%가 바라는 동물복지 문화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놓치지 않는 후보가 새로운 K-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社說

진영간 결집 전국 민심 '내란 심판'이 판가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간 결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지난 24일과 2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민심을 현장 취재한 결과를 보면 양 진영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신협은 같은 기간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이 후보가 46.5%로 김 후보(40.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격차는 6.1%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46.6%로 김 후보(37.6%)보다 9%포인트 앞섰는데 그 사이 두 후보간 격차가 더 좁혀졌다. 50%를 넘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종반에 가면서 40% 중

반에서 정체된 사이 김 후보가치고 올라오는 형국인 것을 보면 보수층의 결집이 더 거센 양상이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대선은 막판 보수층 결집과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변수였다. 예상대로 보수층 결집은 종반에 가면서 현실이 되고 있고 단일화는 이준석이 거부하고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한신협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54.7%로 본인의 지지율보다 8.2%포인트 높아 지지율 10.3%인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막판까지 승리를 담담할 수 없는 게임이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선거일까지 감금이 상태에 놓인다. 이번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될 것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때

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내란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활력 광주' 기대

광주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은 6339명인데 2029년까지 유학생 수를 1만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단 순히 인제 유치에 그치지 않고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현재 5% 미만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내 정착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꿈은 세계로, 시작은 광주에서'라는 이 프로젝트에는 5년간 258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유치·양성·활용 등 3단계 유치 전략 아래 13개의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광주글로벌허브센터 설립, 지역대학 공동 해외 유학박람회 추진, 거점 한국어센터 구축, 산업 연계 인턴십 및 창업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지역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6월까지 '해외인재

유치 전략협의체'를 발족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중간·연차 점검을 통해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광주는 지난해 기준 순유출의 75.4%가 청년일 정도로 젊은층의 타 지역 진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은 이런 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볼 때 기대감이 높다. 계획대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주로 몰려 온다면 지역에도 활력이 넘칠 것이다.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정착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 관건은 일자리 창출이다. 유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광주시가 대학과 기업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無等鼓

우리나라는 밥 없이 못 사는 쌀의 민족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쌀의 품질이 일본에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6·25전쟁 이후 굶어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했던 만큼 쌀의 품질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들어 정부가 통일벼를 보급했지만 이 품질은 맛이나 품질보다는 수확량 계고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일본 쌀에 비해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 하더라도 일본 쌀로 밥을 지어 먹는 집은 권력가나 부자집이라는 인식마저 있었다.

해남쌀 완판

일본 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현지 제품보다 수 배 이상 비싸게 팔렸다. 특히 일본인들은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커 다른 나라 쌀은 아무리 저렴해도 거의 먹지 않았다.

70,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한 품종 연구와 종자의 국산화를 통해 최고 품질의 벼를 개발해왔다. 최근 수년 새 품질 면에서 일본 쌀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지만 이를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최초

로 일본에 수출된 한국 쌀, 그것도 전남 해남 쌀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완판되면서 드디어 우리 쌀의 진가를 증명했다. 해남군에서 생산한 쌀인 '땅갈 햇쌀' 2톤이 4월 8일 일본 판매 개시 열흘 만에 완판됐다.

일본에 한국 쌀이 건너간 것은 2011년과 2012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구호용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폭발적 인기로 수입에 이달초 추가 수출된 10톤 물량 역시 짧은 기간에 완판됐고, 여기에 10톤이 또다시 수출됐다. 해남 쌀이 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이후 강원 삼척 쌀과 경남 하동 쌀, 전남 강진 쌀 등이 수출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 쌀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잡은 해남 쌀이 현지에서 품질과 맛을 인정받으면서 한국 쌀 물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해남 쌀은 일본 외에 도 2024~2025년 미국·캐나다 등 6개국에 총 1383톤(30억원)을 수출 확정할 상황이다. 쌀 선택에 대한 기준이 높은 일본인들 면에서 일본 쌀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지만 이를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최초 /채희종 디지털본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